

놀라운 적중률, 점수가 나오는 선행정학 모의고사

2024 김중규 선행정학

ALLPASS
모의고사
—
국가9급

문제편

PREFACE : 머리말

「2024 김중규 올패스 선행정학 모의고사 국가9급」을 펴내며

2020년 새로워진 디자인과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선보였던 올패스 선행정학이 올해에도 더욱 신선하고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해마다 행정학이 출제경향이나 난이도 면에서 시험 종류(시행처)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8년까지는 9급과 7급, 국가직과 지방직을 구분하지 않고 동형모의고사 교재를 단권으로 출간하다보니 교재 분량도 많아지고 출제경향이나 난이도 면에서 시험종류별로 적합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하여 저희 카스파(김중규 행정학 아카데미)에서는 2019년부터 올패스 선행정학 동형모의고사집을 시험대상에 적합하게 다양화하여 시리즈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하에 올해에도 2024 올패스 선행정학 첫 번째 교재이자 2024 국가9급에 완벽하게 포커스를 맞춘 「2024 김중규 올패스 선행정학 모의고사 국가9급」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2024 김중규 올패스 선행정학 모의고사 국가9급」의 특징은

첫째, 철저히 2024 국가9급 시험에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맞추어 32회분 문제를 엄선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법령개정사항(특히 「지방자치법」) 등을 반영한 새로운 문제들을 추가하고 기존의 문제도 개편내용에 맞게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행정학이 정형화된 기출문제의 틀에서 많이 벗어나 응용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참신한 응용문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구성비율을 보면 최근 9급 기출문제 30% + 기출문제 변형 30% + 신경향 응용문제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넷째, 최근 시험장에 가면 늘 기존의 이론에서 벗어난 새로운 문제를 접하면서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출제위원급 교수들의 최근 개정판 저서들을 참고하여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각종 행정학 이슈들을 중심으로 신경향의 문제를 구성하여 포함시켰습니다.

다섯째, 각 회별로 해설 끝 부분에 예상평균점수와 상위 20% 점수를 제시하여 자신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각 문제별로 2024 기본서 출처를 표기하고, 중요도를 상중하로 나누어 ★표시 하였습니다.

일곱째, 국가9급 동형모의고사는 "동형모고의 기본서"라 할 만큼 문제 수가 많고(32회분) 동형모의고사의 기본이 되는 모의고사이므로 국가9급이 아닌 다른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국가9급 동형모의고사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풀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전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접하게 될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들이며, 이 모의고사결과는 여러분들이 실제 수험장에서 받게될 성적표나 마찬가지로이니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한 문제 한 문제 공들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시험은 기본이론 테스트도 아니고 단원별 문풀도 아닌 전범위 동형문풀 점수로 말해주는 것이니만큼 전범위 동형문풀 모의고사에 빨리 적응하고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점행정학은 열정 있는 강의와 교재, 그리고 열정 있는 공부만 만나야 완성됩니다. 열정으로 만들어진 2024 올패스 선행정학 시리즈와 여러분들의 열정 있는 노력이 합쳐져 부디 만점행정학으로 이어지길 간곡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열정을 바친 시간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교재는 오는 2024.2.24. 공단기에서 개강하는 동형문풀 특강교재로 사용되며 같은 기간에 동시에 진행될 헛총(헛갈리는 부분 총정리) 특강과 함께 수강하신다면 마무리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2024 국가9급 시험이 3.23.로 앞당겨진 만큼 조만간 기출·OX 등 다른 커리를 마무리하시고 동형모의고사를 조금 일찍 시작하셔서 실전감각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더욱 새로워진 「2024 김중규 올패스 선행정학 모의고사 국가9급」으로 2024 국가9급 시험에서 부디 고득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2.
카스파 연구실에서 지은이

김중규

CONTENTS

PART 문제

제01회 모의고사	10	제17회 모의고사	106
제02회 모의고사	16	제18회 모의고사	112
제03회 모의고사	22	제19회 모의고사	118
제04회 모의고사	28	제20회 모의고사	124
제05회 모의고사	34	제21회 모의고사	130
제06회 모의고사	40	제22회 모의고사	136
제07회 모의고사	46	제23회 모의고사	142
제08회 모의고사	52	제24회 모의고사	148
제09회 모의고사	58	제25회 모의고사	154
제10회 모의고사	64	제26회 모의고사	160
제11회 모의고사	70	제27회 모의고사	166
제12회 모의고사	76	제28회 모의고사	172
제13회 모의고사	82	제29회 모의고사	178
제14회 모의고사	88	제30회 모의고사	184
제15회 모의고사	94	제31회 모의고사	190
제16회 모의고사	100	제32회 모의고사	196

2024년 3월 23일 시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행정학

응시번호	
성명	

문제책형
가

【시험과목】

제1과목	국어	제2과목	영어	제3과목	한국사
제4과목	행정법	제5과목	행정학개론		

응시자 주의사항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나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답안지 책형 표기는 시험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 책형(1개)에 "●"와 같이 표기하여야 합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히, 선택과목의 경우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하실 수 없습니다.
 -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제2회 모의고사

01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과관리 및 정책평가 제도이다.
- ② 평가결과는 기관차원에서 정책개선, 예산편성 및 조직관리 등에 활용된다.
- ③ 평가결과가 개인차원에서 직무성과계약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④ 평가결과는 성과급과도 연계되어 운영되며,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결정시 반영된다.

02 넛지(nudge)의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넛지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선택설계라고 한다.
- ㄴ. 정책대상집단의 행동에 개입하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한다.
- ㄷ. 넛지는 디폴트 옵션 설정 방식처럼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수단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ㄱ, ㄴ, ㄷ

03 2024.1.1. 현재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 외에 가계나 기업에 대하여 무상 또는 생산비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비영리기관의 재정도 포함된다.
- ② 과거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앙정부의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 등도 현재는 통합재정에 포함되고 있다.
- ③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 지방재정은 아직 포함되지 않고 있다.
- ④ 최근의 국제기준은 회계단위가 아닌 제도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재정의 범위를 점차 확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04 홀렛(Howlett)과 라메쉬(Ramesh)의 모형에 따라 정책의제 설정 유형을 분류할 때,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중의 지지	높음	낮음
의제설정주도자			
사회 행위자 (societal actors)		(가)	(나)
국가(state)		(다)	(라)

- ① (가) -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슈를 제기하여 정책의제에 이른다.
- ② (나) - 특별히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정책을 주도한다.
- ③ (다) - 이미 공중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된 후 집행이 용이하다.
- ④ (라) - 정책결정자가 이슈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정책의제화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공중의 지지는 필요없다.

제1회 정답 및 해설

01	①	02	④	03	④	04	②	05	④
06	②	07	②	08	②	09	④	10	④
11	①	12	②	13	①	14	④	15	①
16	②	17	④	18	④	19	③	20	④

01

2024 선행정학 p.336 ①

★★★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의 일종인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에서는 목표의 난이도와 구체성이 강조되었다. 즉, 목표가 어느 정도 어렵고(도전적이고) 구체적일 때 동기부여의 효과가 높다고 했다.

- ☑ ② [×] 매슬로우(Maslow)가 아니라 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에 해당한다. 매슬로우는 욕구의 좌절과 퇴행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 ③ [×] 해크먼(Hackman)과 울드햄(Olaham)의 직무특성론이 아니라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VIE이론)에 해당한다.
- ④ [×] 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이 아니라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중축 2개요인이론에 해당한다.

☞ Locke의 목표설정이론

Locke(1668)는 인간의 행동이 의식적인 목표와 성취의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고, 욕구의 내용이 아니라 목표의 성격 즉, 난이도와 구체성, 목표성취도에 대한 환류 등에 따라 개인의 성과가 결정된다고 봄.

02

2024 선행정학 p.225 ④

★★★

사업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재가치는 작아진다. 현재가치의 계산수식구조상 할인율과 할인기간이 분모에 위치하기 때문에 할인기간이 길어지고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현재가치는 줄어든다.

☞ Locke의 목표설정

$$P = A \left[\frac{1}{(1+i)^n} \right]$$

- P: 현재가치
- A: 미래의 비용 · 편익
- n: 기간
- i: 할인율

- ☑ ① [○] 비용편익분석은 합리주의에 입각한 총체적 예산결정시 유용한 대안탐색 기법으로 사용된다.
- ② [○] 내부수익률은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즉, 편익-비용비율을 1로, 순현재가치(편익-비용)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 ③ [○] 사회적 비용편익분석(social cost benefit analysis)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형평성이라는 평가기준이 요구되는 재분배정책의 경우 공공사업의 분배적 효과를 감안한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즉, 소득계층별로 다른 분배가중치(distributional weight)를 적

용해 계층별 순편익을 조정 · 결정할 수 있다.

- ⑤ [○] 현실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가격 대신 잠재가격(그림자가격)을 사용해야 하므로 사업의 유리함이나 불리함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잠재가격 등을 왜곡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03

2024 선행정학 p.287 ④

★★

정책평가모형에는 그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 논리모형과 목표모형(목적달성 평가모형)이 있다. 이해관계자의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프로그램의 논리적 ·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모형은 목표모형(목적달성 평가모형)이 아니라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장점이다.

- ☑ ① [○]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형성평가 도구의 일종으로 정책프로그램의 요소들과 정책프로그램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인과경로순서)를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도식화하여 배열하여 보여주는 하나의 텍스트(흐름도)이다.
- ② [○] 목표모형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총괄평가의 도구로 정책이 달성하려는 장기목적과 중단기목표를 잘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사후적 평가모형이다.
- ③ [○] 목적달성 평가모형은 목표모형과 같은 말로 정책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여부를 선별적 ·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목표가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명확성과 단순성을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04

2024 선행정학 p.427 ②

★★★

ㄱ, ㄷ만 옳다.

- ☑ ㄱ [○] MBO는 부서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상하간의 참여를 통하여 상향적으로 설정한다.
- ㄴ [×] 반대이다. MBO는 중 · 장기 목표(Goal)보다 단기목표(Objective)를 강조한다.
- ㄷ [○] MBO는 폐쇄모형이므로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환경보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하에서 성공확률이 높다.
- ㄹ [×] MBO가 추구하는 목표는 추상적 · 질적 · 정성적 · 주관적 목표보다는 구체적(객관적) · 양적 · 정량적 목표이다. MBO는 중 장기목표(Goal)보다는 기본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단기목표(Objective)를 중시한다. 정성적 목표란 정량적 목표의 반대말로 주관적이고 질적인 목표를 의미한다.

☞ MBO(목표관리)는 이것이 핵심이다!

- (1) 목표 : 가시적 · 미시적 · 결과적 · 계량적(정량적) · 단기적 · 개별적 · 객관적 목표
 - ※ 거시적 · 과정적 · 장기적 · 궁극적 · 포괄적 · 주관적 · 질적(정성적) 목표는 MBO가 추구하는 목표의 특성이 아니다.
- (2) 관리 : Y이론 · 분권적 · 참여적 · 동태적 · 상향적 관리
- (3) 기본구성요소 : ① 목표설정 ② 참여 ③ 환류

★★

공무원 인건비와 국방비 등은 경직성이 강한 지출이지만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와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은 아니다. 경직성이 강한 **재량지출**이다.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	의무지출	재량지출
개념	재정지출 중 법률(조약 포함)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부분으로 정부의 재량적 의사 결정에 의해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재정지출
지출근거	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 제4호의 2	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 제4호의 3
발생원인	정부의 지출의무가 명시된 재정수반법률	사업추진 근거법 등
지출규모	법령에 의하여 결정	국회의 심의에 의하여 결정
예산변경 방법	재정수반법령의 제·개정(입법과정)	예산심의과정에서 규모 조정
예산안 심사관점	편성규모의 정확성 등	정책(사업)과 규모의 타당성 등
종류(예)	교부금, 채무상환, 법정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지출 포함), 사회보장지출, 이자지출 등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국방비, 인건비 등은 경직성 재량지출) 등
예산부족 시 대처	예산부족시 예비비 또는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지출	예산부족시 프로그램 한도 내에서 전용 가능(예비비나 추경예산을 강제하지 않음)

📊 TEST STATS

	9급	7급
난이도	상 중 하	상 중 하
예상 평균점수	68.5점	71.2점
상위 20% 예상점수	88.9점	90.8점

제2회 정답 및 해설

01	③	02	④	03	③	04	④	05	③
06	④	17	③	08	①	09	②	10	④
11	④	12	④	13	①	14	④	15	③
16	③	17	②	18	②	19	③	20	③

01

★★

정부업무평가의 결과는 기관차원에서는 정책개선, 예산편성 및 조직관리 등에 활용되며, 개인차원에서는 직무성과계약에 반영되고 성과급과도 연계 운영되며,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결정시에도 반영된다. 우리나라 4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의 성과계약평가제도의 공식명칭이 “성과계약 등 평가”인 것은 개인의 성과평가시 성과계약에 명시된 개인별 성과목표 뿐 아니라 기관별 정부업무평가결과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 ☑ ① [○] 우리나라의 공식적이고 대표적인 성과관리 및 정책평가제도로서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특정평가, 공공기관 평가가 있다. 국무총리실 소관사항이다.
- ② [○] 평가결과는 기관차원에서 정책개선, 예산편성 및 조직관리 등에 활용되는 등 정부의 정책·예산·조직관리 등에도 피드백되고 있다.
- ④ [○] 평가결과는 개인차원에서도 활용되는데 개인별 성과급과 연계되어 운영되며,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결정의 토대가 되는 성과계약 등 평가에도 반영된다.

📌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중지특공

중앙행정기관 평가	자체평가(소속기관 포함), 필요시 재평가(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 평가	자체평가, 필요시 평가지원(행안부장관), 합동평가(행안부장관)
특정평가	국정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평가(국무총리)
공공기관 평가	외부평가(자체평가 불인정)

02

★★

ㄱ, ㄴ, ㄷ 모두 옳다. 넛지이론(Nudge Theory)은 세일러(Thaler)와 선스 타인(Sunstein)에 의해 2008년 이후 급부상한 이론으로 공공가치관리론 등과 함께 탈신공공관리론을 구성한다.

- ☑ ㄱ [○] 넛지이론은 선택의 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부드럽고 유연한 방식의 선택설계를 의미한다.
- ㄴ [○] 넛지는 정책대상집단에게 도덕적 설득, 경제적 유인, 강압적 규제 등을 하지 않고, 간접적이고 유도적인 방식의 정부개입을 통해 구성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이다.

★★

Quinn & Rohrbaugh의 경쟁적 가치모형 중 응집성과 사기를 강조하는 모형은 인간관계 모형으로 위계문화가 아니라 집단(관계지향)문화를 제시한다.

- ☑ ② [○] 혁신(발전)지향 문화는 개방체제모형의 문화로 창의성과 유연성을 강조한다.
- ③ [○] 과업지향 문화는 합리목표모형의 문화로 생산성과 능률성을 강조한다.
- ④ [○] 관계지향 문화는 인간관계모형으로 응집력과 사기 유지를 강조한다.

☞ 효과성 평가를 위한 경쟁적 가치 접근법(Quinn & Rohrbaugh) 1)

초점(지향) 구조	조직(외부)	인간(내부)
통제	[합리목표모형] - 합리(과업)문화 ²⁾ • 목적: 생산성, 능률성 • 수단: 기획, 목표설정, 합리적 통제	[내부과정모형] - 위계문화 • 목적: 안정성, 통제와 감독, 균형 • 수단: 정보관리, 의사소통
유연성	[개방체제모형] - 발전(혁신)문화 • 목적: 성장, 자원획득, 환경적응 • 수단: 유연성, 융이합, 준비성, 창의성	[인간관계모형] - 집단(관계)문화 • 목적: 인적자원 발달, 팀워크, 능력발휘, 구성원 만족 • 수단: 응집력, 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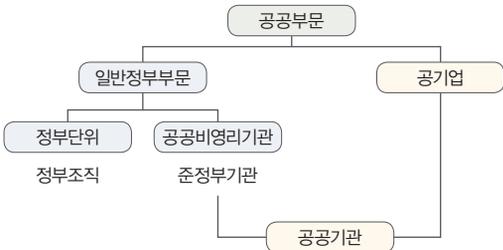
1) 하나의 조직도 성장단계에 따라 적용모형이 달라진다. ■ 통합내인체조

2) Quinn 등은 경쟁적 가치접근법을 통하여 조직효과성모형을 조직문화유형론으로써 지 연계·발전시켰다.

★★

반대이다. 준정부기관은 정부가 위탁한 공적기능을 정부의 대리인 자격으로 처리하는 기관으로 공공비영리기관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에 비해 사업성보다 비영리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 공공부문의 구성



★★

티부모형(Tiebout Model)은 다수의 소규모 자치정부에 의한 분권적 행정체제가 주민들의 이동과 선택을 가능하게 하여 효율적인 지방공공재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모형으로 자치단체별로 한 가지 이상의 고정적 생산요소 존재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 ①②④ [○] 모두 티부모형의 전제조건으로 맞는 지문이다.

☞ 티부가설(발로 하는 투표)의 기본가정

- ① 다수의 지역사회(소규모 지방정부) 존재
- ② 완전한 정보
- ③ 지역간 자유로운 이동 - 완전한 이동
- ④ 단위당 평균비용 동일 - 규모의 경제 작용 X, 규모수의 불변
- ⑤ 외부효과의 부존재 →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재산세가 유일한 자원
- ⑥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 재산세
- ⑦ 한 가지 이상의 고정적 생산요소 존재
- ⑧ 최적규모의 추구 - 규모가 크면 주민 유출, 작으면 주민 유입

★★

반대이다. 보수주의의 이상적 정의는 교환적 정의이지 배분적 정의가 아니다. 교환적 정의는 시장의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장적·거래적 정의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한다는 보수주의자들이 선호하는 평균적 정의에 기초한다. 반면, 배분적 정의는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우선적 배분을 중시하는 진보주의적 정의를 말한다.

- ☑ ① [○] 진보주의는 자유와 평등이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자유를 옹호하지만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개입을 허용한다.
- ② [○] 진보주의는 소수민족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임용할당제 등)을 선호한다.
- ④ [○] 보수주의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선호한다. 보편적 복지는 자격이나 조건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선별적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정부관

구분	진보주의(좌파) - 큰 정부론	보수주의(우파) - 작은 정부론
인간관	① 육구, 협동, 오류의 가능성 있는 인간 ② 경제인관 부정	① 오류의 가능성 없는 인간 ②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
가치관	① 자유를 열렬히 옹호(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 정부에 의한 자유) ② 결과의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부개입 허용 ③ 배분적 정의(부의 공정한 분배) ④ 공익의 실제설(공동선, 시민의 미덕)	① 자유를 강조(간섭이 없는 소극적 자유, 정부로부터의 자유) ② 기회의 평등과 경제적 자유 강조 (소득, 부 또는 결과의 평등은 경시) ③ 교환적(평균적) 정의(거래의 공정성) ④ 공익의 과정설(개인의 자유)
시장관	① 효율과 공정,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 인정 ②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에 의해 치유가능	①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 ② 정부불신, 정부는 개인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경제조건을 악화시키는 전체적 횡포
정책관	① 소외집단을 위한 정책 선호 ② 공익목적의 정부규제정책 ③ 조세증액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	① 소외집단을 위한 정책 비선호 ② 정부규제 완화와 시장지향 정책 선호 ③ 조세 감면 확대

★★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은 합리적인 고위관료들이 예산극대화 동기보다 관청형성동기가 더 강하다고 주장한다. 책임이 수반되는 계선기능은 다양한 정부조직을 형성하여 떠넘기고, 자신들은 참모기능을 수행하기를 선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사적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을 우선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던리비(Dunleavy)는 관청형성모형에서 니스칸넨(Niskanen)과 달리 예산극대화동기보다 관청형성동기에 의하여 정부실패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료가 공적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 ☑ ① [○] 공공선택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Ostrom, Buchanan, Tullock 등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유경쟁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데, 그 논리 자체가 국가역할을 경시하고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하는 것이어서 시장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고유한 한계 또한 가지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 티부(Tiebout)모형은 다수의 소규모 지방정부 존재, 완전한 정보, 자유로운 이동, 외부효과의 부존재 등을 전제로 한다.

☞ 니스칸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결과와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전략 비교

공통점	차이점	
	Niskanen (관료예산극대화가설)	Dunleavy (관청형성론)
① 공공선택론의 기본 가정 응용	① 모든 예산, 기관, 직위에서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동기를 일률적으로 강조	① 예산의 유형, 기관의 유형, 직위 등에 따라 예산 극대화 동기가 달라짐
② 인간에 대한 이기적 가정수용	② 관청형성동기보다 예산극대화 동기 강조	② 예산극대화동기보다 관청형성동기 강조
	③ 예산팽창으로 인한 정부실패	③ 관청형성으로 인한 정부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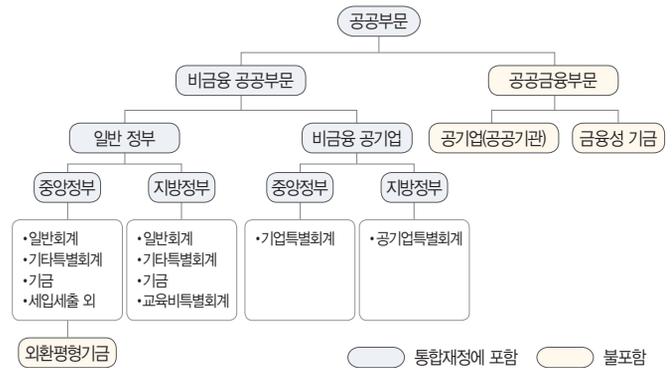
★★

주의하여야 한다. 지방재정은 2005년부터 포함되었으며, 금융성기금 등 금융활동의 경우 종래에는 1987년 IMF 재정통계편람(GFSM)에 따라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1년 새로 마련된 IMF 재정통계편람에서는 이를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우리 정부도 2012년 새로운 2001 재정통계편람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성기금 등을 통합재정에 포함시키기로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2018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2001 GFSM에 따라 금융성기금과 외환평형기금, 공공비영리기관도 모두 통합재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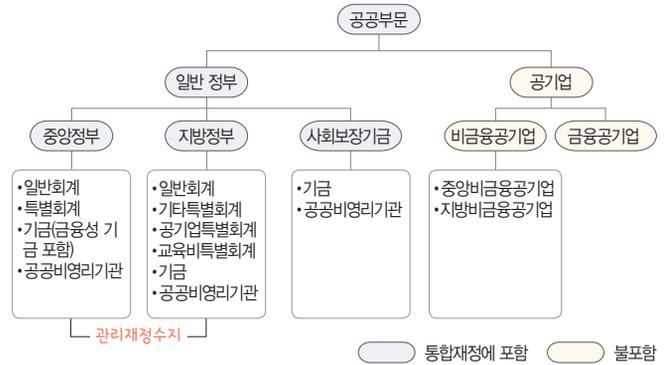
- ☑ ② [×] 작성방식은 세계잉여금은 현금중심이므로 현금주의로 작성하지만 통합재정수지는 2001 GFSM에 따라 현금주의 대신 발생주의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변경되었다. 세계잉여금은 현금주의로 작성된다.
- ③ [×] 반대이다. 과거에는 재정활동과 직접 관계없는 금융활동은 제외시키는 등 회계단위기준이었으나 제도단위기준으로 분석단위가 바뀌어 금융활동 등도 포함된다.
- ④ [×] 공공비영리기관도 포함되고 있다. 공공비영리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가게나 기업에 대하여 무상 또는 생선비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주체를 말하는데 기

본적으로 제도단위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단위가 설립하여 지배하고 공적 기능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정부부문에 포함되므로 통합재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 회계단위 기반 통합재정 포괄범위(1986 GFSM) - 종래



☞ 제도단위 기반 통합재정 포괄범위(2001 IMF GFSM) - 현재



☞ 통합재정수지 작성방식 및 기준 변경

구분	1986 GFSM(종래)	2001 GFSM(현재) 1)
분석단위 2)	회계단위 (재정기능과 직접 관련된 거래만 포함)	제도단위 (일반정부부문 3) 수행하는 모든 활동 포함)
통계기록방식	현금주의 (현금의 흐름만 포함)	발생주의 (자산, 부채의 변동 등 경제적 사건 기록)
포괄범위	개요	재정정책과 무관한 금융활동 제외
	금융성기금 (외평기금포함)	제외
	공공비영리기관	제외

1) 우리나라는 2012년에 2001 IMF GFSM(재정통계편람)의 적용을 발표하였으며, 2018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이를 적용하였음
 2) 회계단위란 금융성부문인지 아닌지 회계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는 구분단위를 말하고, 제도단위란 자신의 책임하에 자산을 소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할 수 있고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다른 경제주체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실체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고유한 역할부문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구분단위를 말함.
 3) 일반정부부문이란 정부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영역으로 정부단위(정부조직)와 공공비영리기관(준정부기관)으로 구성됨.

제9회 정답 및 해설

01	②	02	③	03	③	04	③	05	②
06	③	07	④	08	③	09	①	10	②
11	③	12	①	13	②	14	①	15	②
16	④	17	③	18	③	19	①	20	①

01

2024 선행정학 p.143 ②

★★

ㄴ, ㄷ은 틀리다.

☑ ㄱ [○]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에 시장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정부실패의 원인을 연구한 정치경제학적 접근법으로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각한다.

ㄴ [×] 공공선택론자들은 대체로 행정이 정치영역 밖에 있는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단, Ostrom은 정치영역 안에 있다고 주장). 아울러 공공선택론자들은 전통적인 정부관료제의 구조와 과정에 관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공공선택론은 그 가치에 부합되는 체제로 분권화되고 **협동화된 다원조직제**(상황의 요청에 따라 조직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제도)를 선호한다(유사성 X).

ㄷ [×] 니스카넨의 관료예산극대화설에서 정치인들은 한계편익(MB)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하는 점에서 공급하려고 하는데 반하여, **관료들은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지점까지 공급하려고 한다.**

ㄹ [○] 애로우의 불가능성의 정리 중 **비독재성의 원리**로 특정 선호를 강요할 수 있는 결정적 영향력이 존재해서는 안된다.

02

2024 선행정학 p.293 ③

★★★

정책평가를 위한 측정도구가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로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다. 타당성이란 측정의 정확도를 말하며 신뢰성이란 측정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③의 경우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즉, 신뢰성이 높지 않을 때 타당성이 높아질 수는 없지만 신뢰성이 높아도 타당성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행정학에서 충분조건은 없다”라고 수업 때 수차례 강조했던 내용).

☑ ①② [○]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므로 신뢰성은 높아도 타당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

④ [○] 타당성이 없는 측정도구는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게 되므로 정책효과가 없는 대안을 있다고 판단하게 하는 제종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내적 타당도의 전제조건이 되는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가 결여되면 제종 오류나 제2종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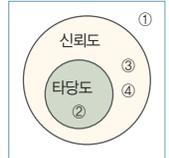
☑ 측정의 효용도

타당도	측정하려는 것(직무수행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지의 정도
신뢰도	시험이 측정도구(형식, 시기 등)로서 가지는 일관성 (타당도의 필요조건)
객관도	채점의 공정성 (신뢰도의 한 조건)
난이도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의 혼합비율의 적정도 (변별력)
실용도	실시 비용의 저렴성 및 실시와 채점의 용이성

☑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

[결론]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신신타낙-타높신높

-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도 낮다.
신뢰도가 높지 않고서는 타당도가 높아질 수 없기 때문
-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
타당도가 높으려면 반드시 신뢰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
- 신뢰도가 높다고 하여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신뢰도가 높은 경우에도 다른 요인에 의하여 타당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
- 타당도가 낮다고 하여 신뢰도가 낮은 것은 아니다.
타당도가 낮은 경우에도 신뢰도는 높을 수 있기 때문



03

2024 선행정학 p.551 ③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보수지급 금지규정은 **법 개정(2023.12.11.시행)으로 삭제되었다.**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업무를 할 수 있는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2.6.10. 개정, 2023.12.11. 시행)

[개정이유]

종래에는 모든 공무원 노동조합 업무 전임자에 대해서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 중 보수지급을 금지하는 등 민간부문과 달리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노동권이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바,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무급전임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
-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고,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수를 고려하되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등의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도록 함.

대 / 한 / 민 / 국 / 대 / 표 / 행 / 정 / 학

행정학의 선을 또한번 새롭게 긋다

고객 HOT LINE

온라인 강의 gong.conects.com
www.kaspa.co.kr TEL. 02-532-5280~1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고시학원 TEL. 02-812-6521

펴낸날 2023년 12월 22일

펴낸이 김중규

펴낸곳 (주)카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B동 601호

도서문의 TEL. 02-532-5314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